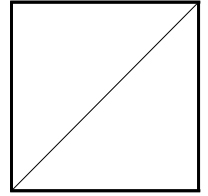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19 호	의 결 사 향
의 결 연 월 일	2022. 4. 13. (제 7 차)	

교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4. 13.

1. 의결주문

교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교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교보증권(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관련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및 제8호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제2항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제7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0호 바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2.2.17.) 심의필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2022.3.23.) 심의필
- 제7차 안전검토소위원회(2022.4.7.) 심의필

<별지>

교보증권(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80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85조 제5호 및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87조 제4항 제1호, 제7호, 제9호,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 제4-63조 제9호

☐ 직원에 대한 조치

○ : 과태료 8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2. 조치사유

가.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교보증권(주) ○○부는 20××.×.××. 수익자 1인으로 설정된 ‘■■■■■ △△△△△-▽▽▽▽▽ ■■■■■■ ■■■■■■■■■■ 제△호’의 판매사로서 20××.×.××.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사 ●●●●●●●부 직원에게 동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억원)한 사실이 있음

* 펀드설정(××.×.××.) 당시 수익자는 교보증권(고유) 1인이었는 바, 「자본시장법」 제192조 등에 따라 설정 후 ‘××.×.××. 이후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나.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 1인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교보증권(주) ●●●●●●●부는 20××.×.××. 설정한 '■■■■■ △ △△△△-▽▽▽▽▽ ■■■■■■ ■■■■■■■■■■ 제♠호'의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사 ○○부에서 20××.×.××. ●●●●●●●부 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억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20××.××.××.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음

다.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교보증권(주) ●●●●●●●부는 20××.×.××. '◎◎ △△△△△-▽▽▽▽▽ ♠ ◎◎◎◎ ◎◎◎◎ ◎◎◎◎ 제♣호(▣▣▣)'를 설정(모집금액 약 ■■억원)하여 ▣▣▣▣▣▣과의 TRS계약*을 통해 역외 수익증권**에 투자(약 □□□억원)한 후, 20××.×월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중도상환하여 펀드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은 펀드의 기초자산을 취득한 후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펀드에 이전하고, 펀드는 ▣▣▣▣▣▣에 현금증거금을 제공하는 한편, 수수료를 지급

** 역외펀드인 ▣▣▣▣▣▣▣ ▣▣▣▣▣▣▣ ▣▣▣▣▣▣▣▣▣ ▣▣▣▣▣▣을 통해 ₩₩₩("◎◎◎◎◎ ◎◎◎◎◎◎◎◎ ◎◎◎◎◎◎◎")발행 Note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수익증권

*** 신탁계약상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자로 신탁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

- 동 펀드에 편입된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20××.×.××. 동일한 구조의 '◎◎ △△△△△-▽▽▽▽▽ ■■■■♥ ■■■■ 제⊗호'를 신규 모집·설정(모집금액 약 □□□억원)한 후,

20××.×.××. ㉮㉮㉮㉮과 기존 펀드의 TRS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TRS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집합투자재산간 거래*한 사실이 있음

* ㉮㉮㉮㉮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기초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신규 펀드로부터 현금증거금(㉮㉮㉮억원)을 수취한 후 동 금액 중 기존 펀드로부터 수령한 현금증거금(㉮㉮억원)을 반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기초자산이 신규 펀드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증권(주)은 20××.×.××.~20××.×.×. 기간 중 '㉮㉮㉮㉮ △△△△△-▽▽▽▽▽ △△ △△△△△ 제☯호'의 동일인 발행 어음투자 한도가 3%로 제한됨에도 4.83%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21개 펀드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자산 편입비율 제한 등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집합투자규약 위반 펀드 현황 >

펀드명	위반일	위반 일수*	운용제한 내용	위반내용	비고
㉮㉮㉮㉮ △△△△△-▽▽▽▽▽ △△ △△△△△ 제☯호	'17.×.××	1	동일인 발행CP 3% 이내 보유	4.83% 보유	자체 점검 후 해소
㉮㉮㉮㉮ △△△△△-▽▽▽▽▽ ☯☯☯☯ ☯☯☯☯ ☯☯☯☯☯☯☯☯ ☯-☯호	'17.×.××	1	RP매도 순자산 400% 이내	425% 편입	
㉮㉮㉮㉮ △△△△△-▽▽▽▽▽ ☯☯☯☯☯ ☯☯ ☯☯☯☯ ☯☯☯☯☯☯☯☯ ☯-☯호	'17.×.××	1	RP매도 및 증권차입 합계가 순자산 400% 이내	445% 편입	
㉮㉮㉮㉮ △△△△△-▽▽▽▽▽ ☯☯☯☯☯ ☯☯☯☯☯ ☯☯☯☯☯☯☯☯	'17.×.××	1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30일 초과 불가	만기 31일	

이-★호					
	'17.x.xx.	1	증권차입이 순자산 50% 미만	50.08% 차입	자체 점검 후 해소
	'17.xx.xx.	1	RP매도 및 증권차입 합계가 순자산 400% 이내	합계 447%	
	'18.x.xx.	1	사모사채 편입 불가	'△△△△ △△△△' 편입	
	'18.x.x.	1	RP매도 순자산 400% 이내	406% 매도	
	'19.x.x.	1	채권CP 순자산 60% 이상 투자	미투자	
	'19.x.x.	1	채권CP 순자산 60% 이상 투자	49.36% 투자	
	'19.x.x.	1	채권CP 순자산 60% 이상 투자	54.57% 투자	
	'19.x.xx.	1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30일 초과 불가	만기 1,960일	
	'19.x.xx.	1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30일 초과 불가	만기 1,949일	
	'19.x.xx.	1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30일 초과 불가	만기 1,927일	
	'19.x.xx.	1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30일 초과 불가	만기 1,581일	
	'19.xx.xx.	2	증권차입이 순자산 400% 이내	417% 차입	
	'19.xx.xx.	1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30일 초과 불가	만기 1,251일	
	'20.x.x.	1	어음투자액은 자산총액의 40% 이하 유지	79.79% 투자	
	'20.x.x.	1	어음투자액은 자산총액의 40% 이하 유지	61.9% 투자	
	'20.x.x.	1	채권투자액은 자산총액의 60% 이상 유지	37.68% 투자	
	'19.x.x.	16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 관련 또는 투자대기자금 활용 등 목적 외 단기대출 불가	펀드 대상 목적 외 대출	
	'19.x.xx.	2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 관련 또는 투자대기자금 활용 등 목적 외 단기대출 불가	펀드 대상 목적 외 대출	

* 영업일 기준

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증권(주) □□□□□부 ◇◇◇ □□□은 20××. ×. ××.~20××. ×. ××. 기간 중 타인(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붙임)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7.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바.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법 제202조제1항제7호(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21조제1항제4호(제

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 또는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1)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는 행위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가.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분기별(일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16